

장기재정전망 실시 및 8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향 마련

(재정정책국, 재정지표관리팀, 사무관 김진수, 044-215-5761)

I. 추진 배경

-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만에 제3차 장기재정전망 수행,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 하,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국가재정법 제7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거 장기재정전망 대비 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고, 재정위험 영향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 및 대응방향 마련 필요

* (24.8월)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 이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재정운용전략위(2차관 주재)

(25.1월) "제3차 장기재정전망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전망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 재정운용전략위(2차관 주재)

II. 정책 내용

- (체계적 분석) 다양한 시나리오 및 정책변화 효과 추가 분석, 장기재정전망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제3차 장기재정전망 발표(9.3일)

- (시나리오) '20년 장기전망의 3가지 성장·인구 분석에서 5가지 (중위, 인구고위 및 저위, 성장낙관 및 비관)로 확대 분석*

* '65년 국가채무비율: (중위) 156.3% (인구고위) 144.7% (인구저위) 169.6%
(성장낙관) 133.0% (성장비관) 173.4%

- (정책변화 효과) 재량·의무지출 절감 등 정부 정책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향후 정책대응 시사점 제공

* '65년 국가채무비율: (재량지출 △10% 절감) 144.4% (의무지출 △10% 절감) 121.7% 등

- (공개범위 확대) '20년 장기재정전망 대비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재정전망 투명성·신뢰도 제고

* ('20년) ①'60년 국가채무비율, ②4대 연금 전망 공개 → ('25년) ①연도별 총지출, 총수입,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 상세수치 공개, ②8대 사회보험 전망 공개

□ (사회보험)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방향 발굴 및 부처 협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소관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적극 발굴

사회보험명	재정안정화 추진방향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검토 등 국회 연금특위 논의되는 구조개혁 관련 노력
공무원연금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축소, 소득공백 문제 완화 등 개선방안 검토
사학연금	가입자 간 다양성 확대, 폐교후 조기 퇴직연금 지급,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개선방안 검토
군인연금	연금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축소방안 검토
건강보험	재정운용방식 개선, 국민 이용체계 및 의료보상체계 개선, 합리적 의료 공급관리 등 검토
요양보험	과다 이용유인 해소, 지출절감, 미래부담 급증에 대한 사전 대비 등 검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산재보험	산재 적용대상 확대 등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방안 검토

III. 성과 및 기대효과

□ 인구·성장 시나리오*, 지출절감 등에 따른 국가채무 변동 등 분석
→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정부정책 대응의 중요성 시사

* 인구·성장 낙관 시나리오는 과거 분석한 바 있으나, 비관 시나리오는 최초 분석

□ 국가채무 증가요인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정부 재정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장기재정 분석결과 도출

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①의무지출 증가, ②성장 둔화 등 국가채무 증가 주요요인 분석

②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①성장을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②수입기반 확충, ③지출관리, ④사회보험 개혁 제시